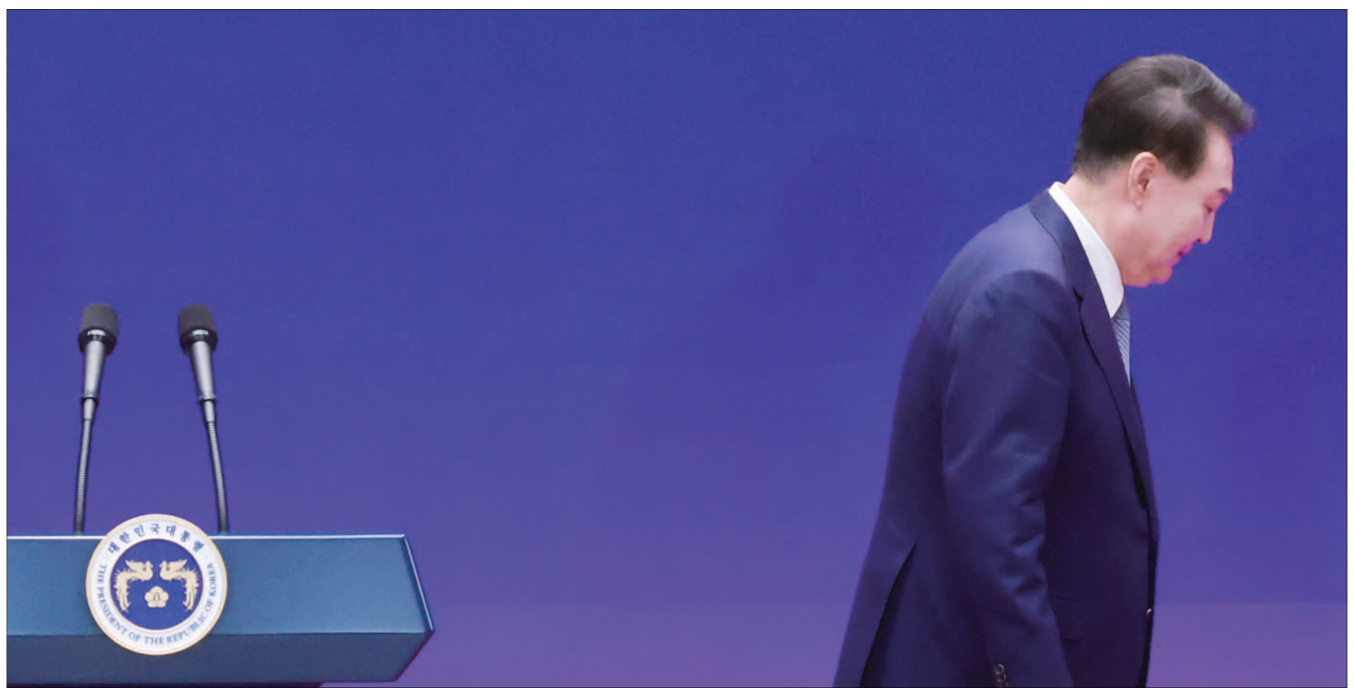
윤 정부 1060일… 계엄 사태로 3년도 못 채우고 단명

‘용산 시대’ 열고 ‘4+1’ 개혁 추진…의정 갈등 등 논란 초래

김여사 의혹에 줄곧 발목…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도 못풀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가려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을 본격화했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3국 간 공조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준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투 병력을 파병하면서 북·러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진 한미·한미일 간 공조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협상·논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외교에 나서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우원식 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은 ‘대선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파면된 尹,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박탈

연금도 못받아…법원 오갈때 ‘기동 경호’ 사라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또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디까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원 내용

		윤석열전 대통령 해당 여부
연금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금액 지급	X
유족연금	유족 중 배우자에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달하는 금액 지급	X
기념사업지원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가능	X
국립묘지안장	서거 시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 묘지 관리 인력·비용 지원	X
보좌인력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지원, 서거 시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운전기사 1명 지원	X
경호·경비	임기를 채운 경우: 대통령경호처 경호 10년 지원 및 필요한 경우 5년 연장,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 이관	X
	중도 퇴임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 경호 5년 지원 및 필요한 경우 5년 연장,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 이관	O
기타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	X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한 경우 등에 해당 시 박탈

연합뉴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尹, 사흘째 관저 머물러… 이번주 퇴거할 듯

기존 서초동 사저 이동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6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오 기자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DOCU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